

[공고번호 :]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자원고제 수요기업 모집 3차 수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북도지사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충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충청북도 내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공동 위기대응을 통한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 (운영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2. 지원내용

- (지원과제명) 충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밸류체인 변화 대응을 위한 Jump-up 공동지원
-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관련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에 문의

-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및 업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 별첨. 2026년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신청제외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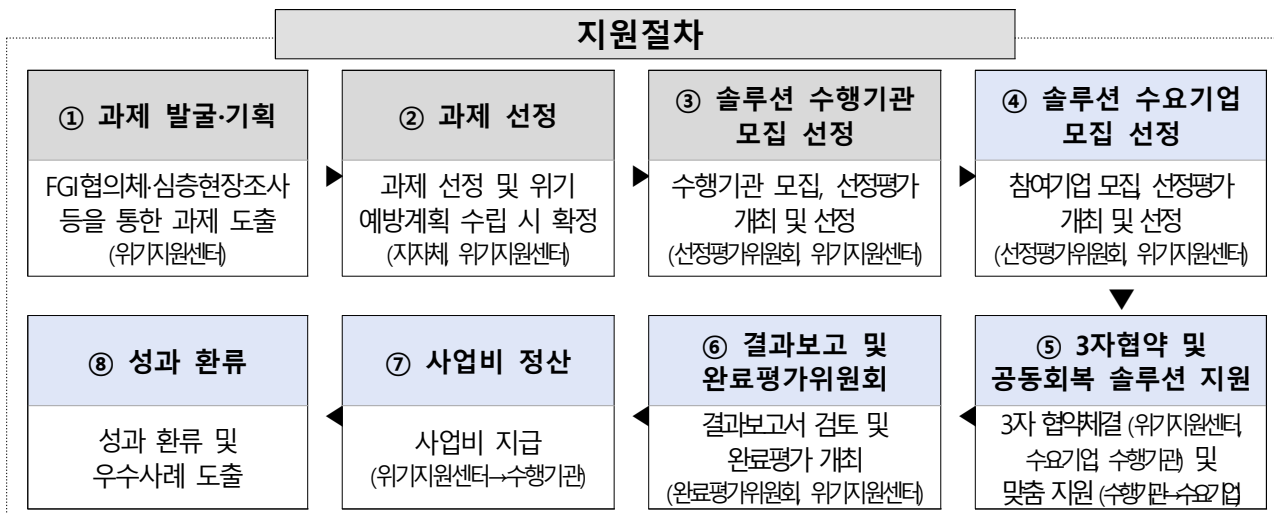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 (지원내용) 충청북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이차전지 업종 영위 중소기업 대상 배터리 셀 공정 실무 기술교육 및 ESG 등급 고도화 컨설팅 패키지 지원
 - 운영기관이 선정한 수행기관이 이차전지 배터리 셀 공정 실무 공동 기술교육, ESG 등급 고도화 공동 컨설팅 지원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액(천 원)
이차전지 배터리 셀 공정 실무 공동 기술교육	- 파우치형 배터리 셀 제조 공정 실무 교육 및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술 공동 집체 교육 * 교육 주제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SG 등급 고도화 공동컨설팅	글로벌 시장 및 대기업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ESG 등급(인권, 노동, 환경 문제) 등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컨설팅	기업당 6,000 (부가세 제외)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에 사업비(부가세 제외)를 직접 지급하며, 부가세는 수요기업(지원기업)이 수행기관에 부담함
- 공동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운영기관(충북TP)에서 수요기업 대상 공동 기술교육 지원(약 2주, 별도의 수요기업 부담 없음)

3. 지원절차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업 현장실사(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 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공동회복 지원, 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현장실사(운영기관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추진)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배점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공동회복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
신청내용의 적절성	- 신청 목적의 명확성 - 신청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30
신청기업의 의지	- 신청기업의 수행의지	20
신청예산의 적정성	-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적정성	10
공동 위기 현황(가점)	- 공통 위기로인(거래단절, 원자재 수급난, 인력난 등) 직면 기업 우선 지원	5점 (가점)

- (지원기업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
- (선정결과 통보) 운영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기업에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관련사항을 안내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6. 22.(월) ~ 2026. 7. 24.(금) 18:00
- (신청방법)

단계	구 분	내 용
1	공동회복 지원신청서(양식)	www.cbtp.or.kr : (사업공고)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2	과제관리시스템 회원가입	contact.cbtp.or.kr : 회원가입(미가입시) 및 기업진단
3	온라인 지원신청	contact.cbtp.or.kr : 자료(제출서류) 업로드 (zip파일)
4	오프라인 서류제출(추후 안내)	선정기업에 한해 원본요청 및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고
필수	①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② 수행계획서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④ 결산재무제표 1부 : 최근 결산일 기준 (3개년)	-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⑥ 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	-
해당시	⑦ 보유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해당기업

6. 기타사항

◦ (성과 및 만족도조사)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수요기업의 매출, 고용 등 지원성과 조사

7. 문의처

◦ 충북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충북테크노파크)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김대환	043-270-2234	dhkim@cbtp.or.kr
이영훈	043-270-2236	yhlee@cbtp.or.kr

별첨. 2026년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 귀사가 해당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한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은 담당자께서는
위기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시군구	밀집지역 유형	밀집지역명
1	청주시 청원구	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2	청주시 청원구	산업단지	청주오창제2일반산업단지
3	청주시 흥덕구	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4	청주시 흥덕구	산업단지	청원옥산일반산업단지
5	제천시	산업단지	제천일반산업단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